

한국체육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 침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4. 4.23. 규정 제9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칙 및 규정을 적용받는 교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일방 당사자가 구성원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와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신고인, 사건관계인, 대리인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권 침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제1호에 기재된 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
 - 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라.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갑질 등 부당행위

마. 인권 침해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입는 행위

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회 상규 및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5. “피해자”란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6. “가해자”란 인권 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7. “신고인”이란 인권 침해 또는 인권 침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9.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10. “사건관계인”이란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가 소속된 부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하여 센터 내 업무 처리에 필요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체계의 구축·운영

2.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홍보

3.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제2장 조직 및 사무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2. 인권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지원

3. 인권 실태 조사 업무

4. 갑질신고센터 운영

5. 그 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등

제7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교직원, 학생, 인권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학생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센터 소관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권조사위원회) ① 인권 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 내 인권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에 접수된 사건이나 센터장이 인지한 사건의 조사 개시 여부
2.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함에도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가 지속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재발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조사 개시 여부
3.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 조사 요청
4.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당사자 출석 또는 의견진술 요청
5. 인권 침해 여부 판단
6.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요청
7. 피해자 보호 조치 결정
8.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 생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학내·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변호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한 성(性)의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를 기준으로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사건 발생 시 제2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조사위원회 회의) 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지된 경우

② 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0조(제척, 회피, 기피) ① 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

1. 인권 침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2.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3.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조사위원회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 의결로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장 조사와 처리

제11조(신고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인권 침해 또는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합리적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과 고충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서면 이외의 방법일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피해자 또는 신고인에게 확인받을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밖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 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 확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임시조치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 침해 등의 즉시 중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2. 피해자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3. 피해자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4.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그 밖에 피해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시조치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인권 침해 사건을 직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조사 완료 후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소집 전 피해자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 ④ 사건에 대한 조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⑤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심의를 하지 않는다.
- ⑥ 조사위원회는 수사, 감사,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보류한 기간은 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사건관계인 및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사실 또는 정보 조회
 3. 사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4. 그 밖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면 상당한 기간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사기구는 센터 소속 교직원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되되, 교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은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인권 감수성과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당사자 간 해결) 조사 기간 중 당사자 간 피해 회복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 당사자는 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철회하는 경우 재신고할 수 없다.

제17조(신고의 기각 등)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제15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와 그 밖의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 종결한 경우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6조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백히 밝혀 센터장이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심의·의결한 사건의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센터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건관계인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건관계인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이 어려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2. 제12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사건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모욕하는 경우 총장에게 당사자에 대한 피해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조사의 종결)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2.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변호사 등 조력을 받을 권리) 당사자는 인권 침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처리 과정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법률 자문) 센터장은 조사, 심의·의결, 피해 구제 조치, 징계 요청, 이의신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① 센터장, 조사위원회 위원, 교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센터장 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나 동의 없이 피해자 등 신원을 노출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 등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사건에서 사실관계 파악 또는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불이익 금지) ① 총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인이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피해자 보호 의무) 센터장 등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인력관리) 센터장은 직원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4대 폭력 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하 “4대 폭력”이라 한다)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4대 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용된 교직원 등에게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경비) 센터 운영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910호,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공포와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인권보호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인권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